

경제위기 한복판...정국 '미세조정' 불가피

하루 앞으로 다가온 10·29 재·보선은 비록 소규모이지만 향후 정국에 미묘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금융 위기의 한복판에서 치러지는 데다 '이명박 개혁입법'을 위한 정기국회의 본격 가동을 앞두고 열리는 선거라는 점에서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전략 미세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 14곳에서 치러지는 이번 재보선에서 가장 많은 10명의 후보를 낸 한나라당은 선거 결과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한나라당은 기초단체장 2곳 가운데 1곳, 광역의원 3곳 가운데 2곳, 기초의원 5곳 가운데 3곳에서의 승리를 '최소 목표'로 잡고 있다.

일단 한나라당이 '1(기초단체장)-2(광역의원)-3(기초의원)' 이상의 성적을 거둘 경

■오늘 10·29 재보선 어떤 영향 미칠까

한나라 기초단체장 2곳 패배면 국정 운영 타격

수도권 없고 지방 14곳 불과...영향 미미 관측도

우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진 6·4 재보선에서의 참패를 만회하는 동시에 여권 전체가 경제·금융 위기로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면 돌파의 발판을 마련하는 셈이다. 당장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여권의 노력에 국민이 신뢰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

안, 금산분리 완화, 각종 감세 법안, 사이버 모욕죄 도입 및 소위 '떼법' 방지법 등 여야가 대치할 현안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드 라이브를 걸 수도 있다.

반대로 기초단체장 2곳 모두에서 참패하거나, '1-2-3' 이하의 초라한 성적표를 낼 경우 좋지 않은 경제상황과 맞물려 국정 운영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게는 반사이

익이 될 전망이다. 당장, 쌀 소득 직불금 국정조사 등으로 여야간 격한 힘겨루기가 예고된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참패는 야당의 기를 살려줄 전망이다. 또한 '박희태 한나라당 체제'의 지도력이 손상을 입는 동시에 연말 개각론을 중심으로 여권 재정비를 촉구하는 '책임론'이 한나라당 내 붕괴 터지듯 쏟아져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번 재보선이 소규모로 치러지는 데다 지역정세가 큰 비중으로 반영되는 성격의 선거라는 점에서 정국에 미칠 후폭풍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기초단체장 1곳, 기초의원 4곳 등 총 5곳에만 후보를 낸 점도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탈당한 자는 그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는 당규(5호 7조)를 내세워 이들의 당원 자격을 정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형평성 논란과 함께 일부에서는 지난 총선과 연계시켜 '보복 징계'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들 대상자들은 유재신·이정남 광주시의원, 김민중 광산구의원 등과 같은 시기에 탈당했고 복당 신청도 총선뒤 비슷한 시기에 함께 이뤄졌는데, 일부만 당원 자격을 정지시킨 것은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해당 의원들은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이런 것부터 공정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성폭력 의혹 제기 여성단체 '역풍'

■정가 브리핑

민주 광주시당 '복당 문제' 논란

○...민주당 광주시당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탈당했던 인사들에 대한 복당 문제로 논란이 휩싸였다.

28일 민주당 광주시당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당원자격 심사위원회를 열고 전갑길 광산구청장과 박석원 광산구의회 의장, 박삼용·송경중·이준열 광산구의회 의원 등에 대한 당원 자격을 정지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탈당한 자는 그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는 당규(5호 7조)를 내세워 이들의 당원 자격을 정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형평성 논란과 함께 일부에서는 지난 총선과 연계시켜 '보복 징계'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들 대상자들은 유재신·이정남 광주시의원, 김민중 광산구의원 등과 같은 시기에 탈당했고 복당 신청도 총선뒤 비슷한 시기에 함께 이뤄졌는데, 일부만 당원 자격을 정지시킨 것은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해당 의원들은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이런 것부터 공정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의원 "해외연수 안가겠다"

○...최근 환율 급등과 주가 폭락 등 금융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광주시의회 한 의원이 매년 실시하던 해외연수를 가지 않기로 해 주목된다.

광주시의회 진선거(민주·북구 1) 의원은 28일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내 실물경제로까지 확산되면서 경제난 극복

에 동참하는 취지로 예산에 편성돼 있던 해외연수비 250만원을 쓰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의원 개인별로 해외연수 비용으로 1인당 연간 180만원(의장·부의장은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이 가능하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방 의원들의 해외 연수에 대한 지역민들의 굵지 않은 시각과 환율 급등에 따른 여행 경비 부담 등을 감안한다면 자발적으로 해외 여행 자체 움직임도 일지 않겠느냐는 반응이다.

"법적·도덕적 책임져야"

○...“꽃뱀 부부”에게 성폭력 혐의로 고소됐다. 김의원은 지난 7월 광주 지역 여성단체 회원 4명을 상대로 500만원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법원으로부터 시의회 주변에서 김 의원 사건과 관련된 이들의 피켓 시위 등을 금지하는 명에 훼손 등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얻어냈다.

김 의원은 "악의적이고 신중하지 못한 채 행하는 무책임한 시위는 살인을 저지르는 것과 같다"면서 "해당 여성단체 회원들은 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악의적이고 신중하지 못한 채 행하는 무책임한 시위는 살인을 저지르는 것과 같다"면서 "해당 여성단체 회원들은 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악의적이고 신중하지 못한 채 행하는 무책임한 시위는 살인을 저지르는 것과 같다"면서 "해당 여성단체 회원들은 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노사정 사회 대타협 체결하자"

한나라 대표 연설 "법국민 협의체 구성을"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여야정 정책협의회' 구성과 '노사정 사회대타협' 체결을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불법 시위에 대한 집단 소송제도 도입, 사이버 모욕죄 신설, 역사교과서 수정, 노무현 정권 시절 감사원 쌀 직불금 부당 수령 감사결과 은폐 진상규명을 강조하는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건들어 정쟁 종단의 의지를 의심케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 여당은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제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갈 것"이라며 "기업인은 공격적인 투자와 고용확대에 나서고 근로자는 강성투쟁에서 벗어나 위기극복에 힘을 모아주고 국민 여러분은 해외 지출을 줄이고 국내 소비를 늘려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4대 중점 추진과제로 ▲감세정책으로 민생고통 해소 ▲규제혁파를 통한 투자활성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떼법' 근절로 공정한 사회질서 확립 등을 제시했다.

홍 원내대표는 '노사정 사회대타협' 체결과 관련, "향후 3년간 근로자는 파업자제와 생산성 향상, 기업은 고용안정과 임금보장, 정부는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한다는 대타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여야간 함께 손을 잡고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기 위해 자유선진당이 제안한 '여야정 정책협의회' 구성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민주당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의 이날 연설에 대해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국회의 존재이유를 일깨운 연설이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여당의 원내 사령탑으로서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사과 한 마디 없었고, 국민과 야당에게 요구만 늘어놓은 무책임한 연설"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못지않은 실망스러운 연설"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법안세 인하를 통한 투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교섭단체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필뉴스

"호남 비하 발언, 관악서장 직위해제 해야"

국회 정보위 '정치사찰' 등 추궁

국회 정보위는 28일 경찰청에 대한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정치사찰' 의혹과 황규욱 관악경찰서장의 호남 비하 발언 문제,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에 대한 감사장 수여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전라도 출신들은 다 잘라야 한다"는 황 서장의 발언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하고 경찰에 황 서장을 즉각 직위해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고 민

주당 박영선 의원은 전했다. 황 서장은 8월 보안지도위원회 소속 민간위원과 경찰 간부들이 참석한 술자리에서 일선 과장들을 지목하며 "전라도 OO, 다 잘라버려야 해"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이 서정갑 본부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한 것을 놓고도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어청수 청정에 대한 경찰론이 제기됐을 때 서정갑이 어청수 장경길 반대 시위를 벌였는데 이에 대한 보은 차원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與野 대정부 질문자 확정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당의 모임(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의 공동 교섭단체) 등 국회 3개 교섭단체는 28일 다음달 3~7일 진행될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설 의원을 확정했다.

광주·전남지역 의원으로는 박주선·이용섭·김영철·조영택 의원이 참여한다.

다음은 분야별 대정부질문자 명단.

- ▲정제(11월3일)=정의화 조진형 공성진 유정복 이은재 홍일표 강승규(이상 한나라당) 천정배 송영길 박영선 최영희(이상 민주당) 이상민(자유선진당) ▲외교·통일·안보(4일)=남경필 유기준 김효재 구상찬 정욱임 윤상현 김동성(이상 한나라당) 추미애 박주선 문학진 박선숙(이상 민주당) 박선영(자유선진당) ▲경제(5일)=최경환 진수희 나성민 고승덕 김성태 손범규 김용태(이상 한나라당) 홍재형 오제세 이광재 이용섭(이상 민주당) 임영호(자유선진당) ▲경제(6일)=이인기 원희룡 이상현 박상은 신영수 김성수 강용석(이상 한나라당) 김진표 이종걸 김성순 노영민(이상 민주당) 이재선(자유선진당) ▲교육·사회·문화(7일)=이계진 허영진 원희목 조전화 주광덕 권영진 안형환(이상 한나라당) 김영진 전병현 양승조 조영택(이상 민주당) 이용경(창조한국당)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세계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계보청기

수세기소라·세계보청기

1588-8400 / 02-722-0100